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LENS INSIGHT / No.13

EU CBAM · 한국 철강 · 탄소비용과 가격 협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청구서

한국 철강의 탄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인증서 산식·배출량 증빙·수출가격 협상으로 읽는 비용의 귀속

산식
실제 부담 대상 배출량

증빙
공제·검증·전구물질

협상
가격·마진·최종 수요

청구서는 EU 수입자에게 간다.
이익의 변화는 공급망 전체에 남는다.

납부 의무와 경제적 부담을 분리하고, 저탄소 생산이 수출기업의 이익으로 남는 조건을 분석한다.

분석 기준일 2026.11.07

TRADELENS.KR

산업구조·수익성·비용배분·규제 영향 분석

01 / RESEARCH VIEW

납부자는 수입자, 부담자는 협상이 정한다

TradeLens 판단 | 한국 철강의 경쟁력은 순탄소비용과 그 절감분의 귀속에서 갈린다.

핵심 결론

CBAM은 한국 철강에 동일한 세율을 붙이는 제도가 아니다. 제품별 인정 배출량과 무상할당 조정, 인정되는 기지불 탄소가격이 청구액을 만들고, 대체 공급원과 계약 조건이 그 비용을 수출기업·수입자·EU 고객에게 나눈다. 기본 전망은 일괄적인 수출 위축보다 **마진과 수주 경쟁력의 차별화**다. [1] [3]

산식	증빙	협상
인정 배출량에서 어떤 조정·공제가 가능한가?	원소재부터 검증 가능한 수치가 이어지는가?	낮아진 비용이 누구의 이익으로 남는가?

법적 신고·인증서 제출 의무는 EU의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있다. 한국 생산자가 그 비용을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경로는 판매단가 인하, 자료·검증비 지출, 거래조건 조정이다. 한국 기업의 EU 수입 자회사가 신고인이면 같은 그룹 안에서도 수출부문과 수입부문의 손익을 구분해야 한다. [1]

기존 해석에서 빠지기 쉬운 변수

낮은 탄소배출은 공급망 전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구매자가 절감분을 모두 가격 인하로 가져가면 생산자의 감축투자 회수는 개선되지 않는다. 반대로 고객 승인·품질·납기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공급자는 비용 전가를 방어할 여지가 있다. 이는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이지 특정 회사의 협상 결과를 확인한 사실은 아니다.

판단을 바꿀 증거

검증된 저배출 제품의 순판매가격·반복 주문이 개선되면 차별화 논거가 강해진다. 반면 인증서 절감액보다 가격 양보·검증·생산비가 더 커지면, 탄소 경쟁력이 기업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판단은 약해진다.

02 / TIMING &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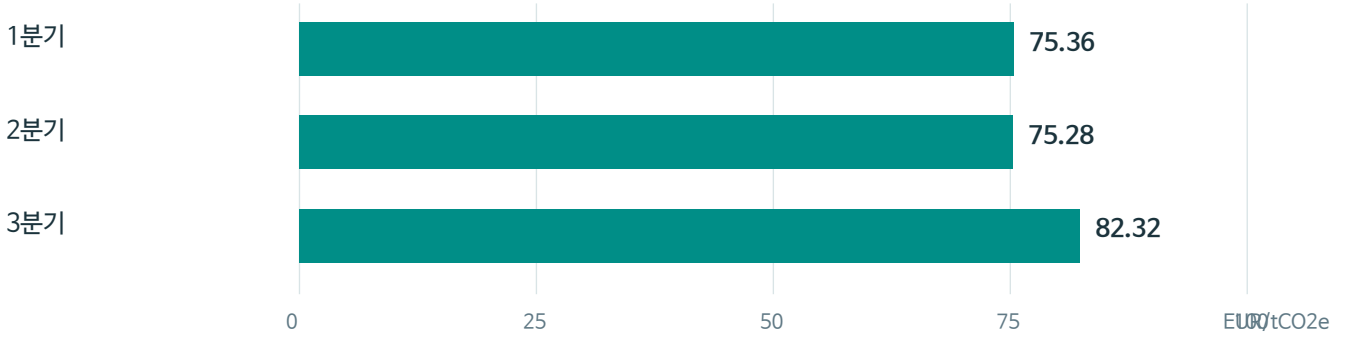
2026년 수입이 2027년 현금 청구로 이어진다

수입 귀속기간·가격 기준·인증서 구매일을 하나의 날짜로 취급하지 않는다.

01	→	02	→	03
수입·기록		**인증서 구매**		**신고·제출**
2026.01.01부터 확정기간		2027.02.01부터 판매 개시		2027.09.30까지 2026년분

2026년분은 해당 수입 분기의 인증서 가격을 사용한다. 구매가 2027년에 이뤄진다고 2026년 수입분 전체를 구매 당일 가격으로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2027년 수입분부터 적용되는 주별 가격 체계와도 구분한다. [2] [5]

공표된 2026년 인증서 가격 [6]



3분기 가격은 10월 5일 공표. 4분기 가격은 분석 기준일 현재 미공표이며 공표 예정일은 2027년 1월 4일이다. 3분기는 2분기보다 9.4% 높다(계산). [5] [6]

변수	사업상 의미
수입 분기	탄소가격 조항의 기준 기간을 주문·선적일과 맞춰 정의해야 한다.
정산 시차	가격 양보가 먼저 발생하면 생산자가 인증서 구매 이전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현금흐름의 관점

납부가 뒤로 밀렸다는 사실은 비용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계약상 할인·유보금·사후 정산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따라 공급망 내부의 운전자본 부담이 달라진다.

03 / PRODUCT BOUNDARY

기업 평균보다 수입 제품의 배출 경계가 중요하다

같은 '한국산 철강'이라도 CN 코드·원소재·공정 경로가 다르면 산정 대상이 달라진다.

CBAM 대상 여부는 수입품의 CN 코드와 법정 범위에서 출발한다. 부속서 II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은 직접배출을 중심으로 산정하지만, 관련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도 연결된다. 응집 철광석 등 별도 품목과 간접배출 예외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7]

01
원소재
선철·슬래브 등
관련 내재배출

→

02
가공공정
압연·도금·열처리
귀속 배출량

→

03
수출 제품
제품·생산량 매칭
수입자에게 전달

항목	올바른 판단 단위	오해하기 쉬운 해석
배출량	해당 제품·설비·공정 및 전구물질	기업 전체 Scope 1·2 감축률을 그대로 적용
제품 탄소표지	CBAM 산식과 검증 범위의 대응	일반 LCA·EPD가 곧 CBAM 검증값이라고 간주
소량 면제	수입자별 연간 합산 순중량 50톤 기준	한국 수출자·선적 건별로 50톤씩 면제

50톤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의 관련 수입을 합산한다. 전력·수소에는 이 질량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을 넘으면 해당 연도 대상 수입 전체에 의무가 적용되며 초과분만의 공제가 아니다. [2]

가공기업의 실질 병목

최종 가공공장의 배출량이 낮아도 원소재 정보가 끊기면 그 장점을 입증하기 어렵다. 필요한 역량은 배출 총량 홍보보다 원소재 공급자와 수입자를 연결하는 제품별 데이터의 연속성이다.

04 / CERTIFICATE ENGINE

‘2.5%만 부담’이라는 계산은 핵심을 놓친다

2026년 계수는 실제 배출량이 아니라 무상할당 조정 계산에 들어간다.

산정 구조를 읽는 식

N = q × max(0, e − F − d)
인증서 비용 C = P × N
q: 수입량, e: 인정 내재배출량/톤, F: 제품별 무상할당 조정/톤, d: 인정된 탄소가격 공제의 인증서 환산량/톤, P: 적용 인증서 가격. 여러 제품·분기는 각각 계산한다. [1] [3] [7]

2026년 CBAM 계수는 97.5%다. 설명용 단순 제품에서 부문 간 보정계수(CSCF)를 1로 놓으면 F = 벤치마크 b × 0.975다. 실제 복합제품의 F에는 해당 공정과 전구물질의 조정이 연결된다. 실제배출 방식과 기본값 방식의 벤치마크 열도 다르다. [3] [4] [14]

계산 방식	의미
잘못된 단순화 e × P × 2.5%	실제 배출량 전체에서 97.5%가 자동 공제된다고 가정한다.
조정 후 계산 (e − F − d) × P	제품의 인정 배출량에서 해당 무상할당 조정과 인정 공제를 차감한다.
하한 0	한 제품의 음수 잔액을 다른 제품의 인증서와 임의로 상계하지 않는다.

무엇이 경쟁력을 바꾸는가

핵심은 도입 첫해의 작은 비율이 아니라 **제품 배출량과 인정 조정분의 격차**다. 같은 국가·같은 판매가격의 제품도 이 격차가 다르면 EU 도착원가가 달라진다. 실제 제품에는 CN·생산경로별 산식을 적용해야 한다.

05 / ILLUSTRATIVE BILL

같은 가격에서도 배출 격차가 청구액을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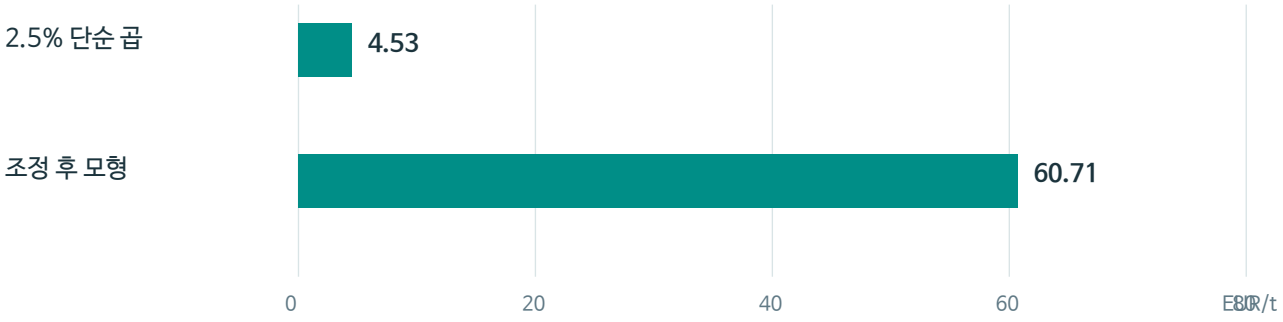
설명용 모형 | 실제 한국 철강 제품·공시 벤치마크·회사 전망이 아니다.

가상 제품의 b=1.50, CSCF=1, 2026년 계수 0.975로 F=1.4625를 가정한다. 기지불 탄소가격 공제 d=0, P는 공표된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다. 배출량 e만 달리하며 조정분은 고정한다. [6] [14]

인정 배출량 e	조정 후 배출량	인증서 비용/제품 톤
1.50	0.0375	€3.09
1.70	0.2375	€19.55
2.20	0.7375	€60.71

e·F의 단위: tCO2e/제품 톤. 비용은 반올림 표시, 계산은 반올림 전 값 사용. F는 제품·생산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는 배출량 한 변수의 효과만 분리한다.

e=2.20에서 계산법이 만드는 차이



조정 후 모형의 비용은 톤당 60.711유로다. 가상 수입량 1만 톤이면 607,110유로다. 같은 조건에서 e를 2.20에서 1.70으로 낮추면 공급망의 인증서 비용은 톤당 41.16유로 감소한다. 이것은 생산기업이 자동으로 얻는 이익이 아니라 수입 단계의 비용 절감이다.

> **읽어야 할 결론**
>
> 감축의 경제적 효과는 실재할 수 있지만, 산정 경계와 조정분을 함께 고정해야 비교가 성립한다. 실제 CBAM 청구액은 법정 벤치마크·전구물질·검증값·공제의 조합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06 / VALUE OF EVIDENCE

검증 비용은 수출물량과 절감분 귀속으로 평가한다

실제배출 방식은 공인 검증이 필요하다.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절감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8]

기본값이 실제 배출량보다 높을 때 검증된 데이터는 청구액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원소재 데이터 연결, 계측·배분, 검증과 정정 대응에도 비용이 든다. 생산자의 투자 판단에는 공급망 전체 절감액이 아니라 **자신이 회수하는 몫**이 들어가야 한다.

설명용 조건	가정 또는 계산
비교용 배출량	2.50 → 2.20 tCO2e/제품 톤
동일 조정·가격	F=1.4625, d=0, P=€82.32
공급망 비용 절감	€24.696/톤 · 1만 톤이면 €246,960
추가 연간 자료·검증비	€15,000 · 이 예시의 가정

전액 회수

608톤
15,000 ÷ 24.696을 올림

절반 회수

1,215톤
절감분의 50%만 생산자에게 귀속

검증 투자 회수량은 법정 50톤 면제 기준과 전혀 다른 값이다. 실제 방식 전환에서는 F도 달라질 수 있다. 위 표는 가상의 배출량 차이만 보려는 모형으로, 특정 국가 기본값이나 실제 검증 견적이 아니다.

상업적 해법

자료·검증비를 생산자가 부담한다면 비용 절감분의 가격 반영, 최소 구매량 또는 공동 비용 부담을 함께 협상할 필요가 있다. 구매자만 비용 절감을 가져가는 구조에서는 좋은 데이터도 생산자의 수익을 개선하지 못한다.

07 / CARBON-PRICE DEDUCTION

K-ETS 시장가격이 곧 CBAM 공제액은 아니다

공제의 출발점은 대응 배출량에 대해 실효적으로 지불한 탄소가격과 그 증거다.

기지불 탄소가격 공제는 단순한 'EU 가격 – 한국 배출권 가격' 비교가 아니다. 법령은 관련 배출량에 대한 지불, 무상할당·환급 등 보상 효과와 증거를 요구한다. 실제배출 방식의 지불 증빙과 기본값 방식의 연간 기본 탄소가격 경로도 구분된다. [1] [2] [7]

확인 항목	비용 계산에서의 역할
배출량의 대응	수출 제품에 귀속되는 배출량과 납부 대상의 연결
실효 지급액	무상할당·환급·보상 효과를 반영한 순부담
증빙·인증	지불·전환 통화·기간·독립적인 확인을 충족
방식의 일관성	기본값 적용 시 법령이 허용한 기본 탄소가격 경로 사용

실제배출을 신고하면 실지급 증빙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기본 배출값을 쓰면 연간 기본 탄소가격에 의한 공제만 허용된다. 집행위가 2027년부터 제공할 수 있는 국가별 기본 탄소가격을 지금 확정 공제액으로 넣지 않는다. [2]

설명용 정산 사례 — 배출권 시세 가정이 아니다

6쪽의 공제 전 비용은 €60.711/제품 톤이다. 여기에 **제품 톤당 €10의 순공제액이 인정됐다고 가정**하면 최종 비용은 €50.711이다. €10은 CO2 톤당 배출권 가격이 아니라 이미 대응·조정·환산을 마친 제품 톤당 공제액이다.

> **확정되지 않은 공제는 누가 부담하는가**
>
> 견적이 예상 공제를 먼저 반영한 뒤 증빙이 인정되지 않으면 잔여 청구가 생긴다. 계약에서 잠정 공제와 확정 공제의 차액 부담을 정하지 않으면, 규제보다 정산 분쟁이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임의 공제율은 본 보고서에서 가정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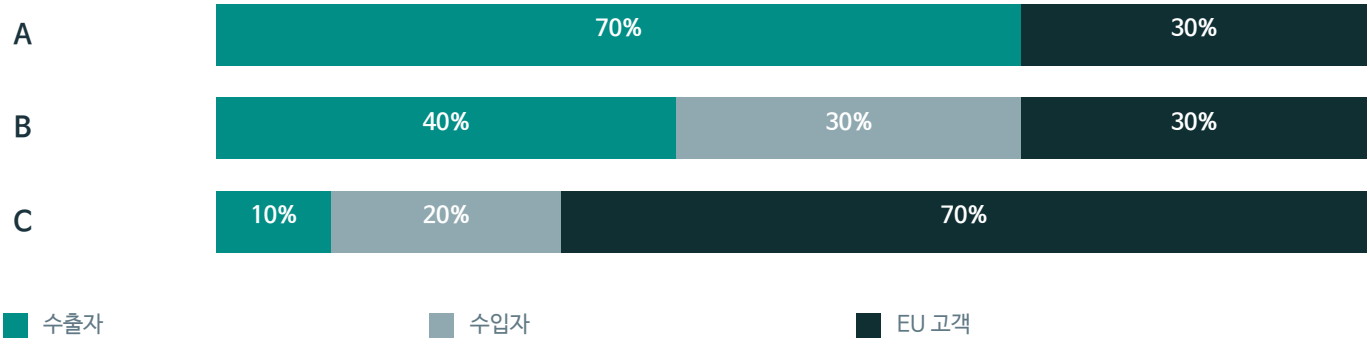
08 / ECONOMIC INCIDENCE

같은 60.71유로가 서로 다른 이익 감소를 만든다

설명용 배분 모형 | 법적 납부자와 최종적인 경제적 부담자를 분리한다.

6쪽의 탄소비용 €60.711/톤을 사용한다. 가상 수출기업의 판매가격은 €700, 단위 변동원가는 €630으로 비용 전 기여이익은 €70이다. 물량·비탄소 비용은 고정하고 수출기업, 수입자, EU 고객 사이의 부담 배분만 바꾼다.

동일한 청구액, 서로 다른 부담 배분



가정	수출자 부담	남는 기여이익
A · 수출자 70%	€42.50/톤	€27.50/톤
B · 수출자 40%	€24.28/톤	€45.72/톤
C · 수출자 10%	€6.07/톤	€63.93/톤

배분 비율 A=70/0/30, B=40/30/30, C=10/20/70(수출자/수입자/EU 고객). 실측 전가율이 아니다. 기여이익은 본 모형의 잔액이며 실제 영업이익·순이익·제품 마진이 아니다.

가격 협상력은 구매자가 공급선을 바꾸는 비용, 제품 승인과 대체 가능성, 수요의 가격 민감도에서 나온다. 범용재 구매자가 선택할 공급원이 많으면 생산자 순수취가격이 눌릴 수 있다. 최종 고객에게 가격을 전가하더라도 판매량 감소가 생기면 고정비 흡수도 나빠질 수 있다.

핵심 판단

국가별 평균 탄소비용만으로 기업 손익을 예측할 수 없다. 같은 법정 청구액에서도 판매단가·거래량·계약의 조합이 이익을 결정한다. 낮은 배출량과 높은 가격결정력은 서로 다른 경쟁력이다.

09 / CONTRACT ECONOMICS

가격 조항이 탄소비용의 귀속을 고정한다

실무 검토 항목 | 개별 계약의 법률 의견이나 완성된 계약 조항은 아니다.

수입자가 인증서를 제출한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판매자가 비용을 전액 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탄소비용 조항이 없다고 경제적 부담이 0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신규 가격 협상과 갱신 과정에서 부담이 이전될 수 있다. [1]

합의할 변수	경제적 쟁점	점검할 기준
가격 기준	어느 분기의 인증서 가격인가	수입 귀속기간·공표값·정산 시점
배출량·조정	실제값과 기본값의 차이를 누가 부담하나	CN·경로·전구물질·F의 대응
자료 실패	검증 지연·불인정·정정 비용	책임 범위·증빙 전달 기한
탄소가격 공제	예상 공제와 확정 공제의 차액	증빙·환급·사후 정산
감축 프리미엄	절감액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나	최소 물량·기간·단가·검증 조건
현금·변경	유보금·금융비용·법령 변경	최종 정산·금액 한도·변경 절차

모형을 계약으로 연결하는 지점

CBAM 비용을 한 줄의 가산금으로 정하지 말고 '배출량·가격·공제·책임'으로 분해해야 한다. 낮은 배출량을 입증한 공급자의 절감분은 장기 구매 조건에 반영될 때 감축투자 재원으로 바뀐다.

10 / KOREAN VALUE CHAIN

가공기업에도 원소재의 탄소정보가 따라온다

대형 제철소의 설비투자만으로 한국 철강 공급망의 대응이 끝나지 않는다.

정부의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발간은 철강 가공과 전구물질 연결 사례를 다룬다. 최종 수출자가 원소재를 직접 제강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배출정보는 상류 설비에서 시작한다. 데이터 경로를 공급계약에 포함하는 것이 가공기업의 실질 대응이다. [9]

기업 유형	잠재적 강점	남는 제약
일관제철 생산자	원소재·공정 정보의 내부 연결	높은 배출 집약도·감축 설비의 투자 회수
전기로 생산자	제품·공정에 따라 낮은 직접배출 가능	스크랩 품질·제품 승인·전구물질 및 조정 차이
강관·도금·가공기업	품질·납기·고객 맞춤형 가공	구매 슬래브·코일의 원천 데이터와 검증 연결
유통·무역기업	고객 접근성·제품 묶음 공급	공급자별 제품·수입 분기·증빙 불일치 관리

EU 역내 생산자 역시 ETS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입품만 탄소비용을 내는 시장'으로 읽는 것은 부정확하다. 무상할당 조정은 이 차이를 반영하는 장치다. 다만 동일 규칙이 동일 실제 원가를 뜻하지는 않으며, 에너지·스크랩·노무·물류와 제품 품질이 총원가를 함께 결정한다. [4] [7]

> **공급망 차원의 전망**
>
> 검증 가능한 원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제철소와 고객 전환 비용이 높은 가공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반면 데이터 비용은 부담하면서 판매단가를 방어하지 못하는 구간에 마진 압박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11 / INDUSTRIAL RESPONSE

저탄소 설비와 CBAM 절감액 사이에는 검증이 있다

포스코·현대제철 사례 | 회사 발표의 실적·계획·산정 경계를 그대로 구분한다.

회사 발표	경제적 의미	곧바로 결론낼 수 없는 것
포스코 광양 전기로 2026.06.17 준공 연산 250만 톤·약 6,000억원 [10]	저감 강재 공급을 위한 생산 기반 확대	250만 톤 전량이 EU 수출·고객 승인·가동 완료 물량이라는 의미는 아님
포스코 최대 약 75% 감축 설명 [10]	조강 Scope 1·2, 2017 - 19년 평균 대비 스크랩·전력에 따라 변동	CBAM 제품별 직접배출·전구물질을 적용한 인증서 75% 감소가 아님
현대제철 HyECOsteel 자사 고로재 대비 20% 이상 저감 설명 [11]	복합공정 및 내부 ISO 14044 기반 cradle-to-gate 산정	EU 공인 CBAM 검증값·확정 수출 프리미엄을 의미하지 않음

포스코는 합탕·품질 제어를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강판·전기강판 양산을 목표로 한다. 현대제철도 복합공정과 후속 기술 확대 방향을 설명한다. 이런 기술 경로는 중요한 사업 선택이지만, 투자 회수는 판매 가능한 강종·가동률·원가·고객 계약에 달려 있다. [10] [11]

> **기업분석으로 연결할 기준**
>
> 설비 총량에 예상 탄소 프리미엄을 곱하지 않는다. 실제 EU 대상 제품 물량, 동일 경계의 배출량·조정분, 추가 생산비와 고객이 인정하는 순프리미엄을 순서대로 연결해야 한다.

12 / ABATEMENT RETURNS

감축투자는 '절감액'이 아니라 '회수액'으로 평가한다

설명용 모형 | 생산경로·조정분·물량을 고정하고 절감분의 배분만 바꾼다.

6쪽의 e=2.20 → 1.70 개선에서 CBAM 비용 절감은 €41.16/톤이다. 추가 생산비를 €25/톤으로 가정하고, 그 절감분을 수출기업이 가격 프리미엄 또는 할인 방어로 회수하는 비율 α를 비교한다. 아래 계산은 설비투자비·세금·금융비용 차감 전이다.

절감분 회수율 α	생산자 회수액	추가 생산비 후 잔액
0%	€0.00/t	−€25.00/t
50%	€20.58/t	−€4.42/t
100%	€41.16/t	+€16.16/t

손익분기 회수율

$\alpha = 25 \div 41.16 = 60.7\%$
이 예시에서 생산자는 인증서 절감분의 60.7% 이상을 회수해야 추가 생산비를 보전한다. 별도 설비투자 회수까지 포함하면 요구되는 수익은 더 커진다.

절감분이 전액 수출기업에 귀속되고 물량이 1만 톤이면 잔액은 €161,600이다. 이는 연산 수백만 톤 설비의 투자수익률이 아니다. 실제 공장에는 EU 외 판매, 가동률, 스크랩·전력 가격, 고정비와 여러 강종의 조합이 존재한다.

성립 가능한 투자 논리

CBAM만으로 투자 경제성을 설명하기보다 품질·에너지 효율·기존 탄소비용·고객 탈탄소 요구를 함께 보아야 한다. 다만 각 편익을 이중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 같은 탄소절감분을 인증서 비용 절감과 별도 프리미엄으로 모두 전액 더하면 수익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13 / POLICY & EXECUTION

현재 청구액과 장기 정책 제안을 분리한다

2026년 비용을 산정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기 변경안을 섞지 않는다.

상태	본 보고서의 적용	기업의 대응 변수
2026년 적용 규칙	제품·배출 경계, 무상할당 조정, 공제, 수입 분기 가격 [1] [3]	제품별 검증 데이터와 가격 정산 체계
확정된 후속 일정	2027년 2월 인증서 구매 개시, 9월 30일 첫 신고·제출 [2]	증빙·현금 준비와 기존 계약 정산
범위 확대 협상	EU 이사회가 2026년 6월 하류 제품 확대 입장 채택 [12]	현재 대상과 장래 대상 후보를 별도 관리
ETS 개정 제안	COM(2026) 616은 입법 제안 단계의 자료 [13]	장기 무상할당·투자 회수 민감도 점검

하류 제품 확대나 무상할당 경로 변경은 구매자가 조달망을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제안서의 일정과 계수를 시행 법령처럼 적용하면 현재 제품의 비용과 투자 회수기간을 잘못 계산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2026년 계산과 장기 정책 위험을 분리한다.

> **일정 관리의 우선순위**
>
> 당장 필요한 것은 2026년 수입분의 제품·물량·배출·공제 정보를 닫는 일이다. 장기 시나리오는 별도로 갱신하되, 현행 의무와 정산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14 / OUTLOOK & MONITORING

한국 철강의 차별점은 낮은 순비용과 회수 능력이다

기본 전망 | 전면적 수출 붕괴보다 제품·공정·계약별 경쟁력 격차가 커진다.

시나리오	함께 나타날 조건	경제적 결과
기본 · 차별화	검증·공제 대응은 진행, 가격 전가율은 제품별 차이	실제 비용과 순판매가격의 차이로 마진 격차 확대
개선 · 가치 회수	낮은 인정 배출량, 안정 물량, 프리미엄·할인 방어	감축·증빙 투자비 회수 가능성 개선
압박 · 양보 확대	데이터 단절, 불리한 기본값, 공제 불인정, 가격 압력	인증서뿐 아니라 검증·금융·물량 비용까지 부담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네 가지

순청구액: 검증 배출량에서 실제 조정·공제가 얼마나 인정됐는가.
순판매가격: 탄소비용을 제외한 원가격과 가격 양보·프리미엄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물량·품질: 반복 주문과 고객 승인이 비용 증가를 흡수하는가.
현금 회수: 검증비·유보금·사후 정산 이후 기업에 남은 금액은 얼마인가.

> **최종 판단**
>
> 한국 철강의 경쟁력은 “CBAM을 누가 내는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인정 가능한 낮은 순탄소비용을 만들고, 그 차이를 계약과 실제 수금으로 확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배출량은 낮아져도 순마진·주문이 나빠지면 긍정적 판단을 낮춰야 한다. 반대의 동반 개선은 이를 강화한다.

시나리오는 조건부 산업 전망이며 기업별 실적·시장점유율·주가 목표나 발생 확률을 제시하지 않는다.

15 / SOURCE REGISTER

핵심 주장과 원문 근거를 연결한다 1/2

청록색 출처번호와 자료명·'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원문으로 이동한다.

01. EU / EUR-Lex | CBAM 기본규정 2023/956 통합본 원문 열기

2025.10.20 · 법령 · 적용 대상·신고·탄소가격 공제·인증서 · 관련 조항 및 부속서

02. EU / EUR-Lex | CBAM 간소화·강화 개정규정 2025/2083 원문 열기

2025.10.08 · 법령 · 50톤 기준·신고 및 구매 일정·탄소가격 공제 변경

0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무상할당 조정 시행규정 2025/2620 원문 열기

2025.12.16 · 시행규정 · 부속서 산식 1 - 6 · PDF 5 - 8쪽

04. EU / EUR-Lex | EU ETS 개정지침 2023/959 원문 열기

2023.05.10 · 법령 · 제10a조 제1a항 · CBAM 계수와 무상할당

0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CBAM 인증서 가격 산정·공표 원문 열기

2026 · 공식 안내 · 수입 분기별 가격 적용·2027년 구매·주별 공표

06. 아일랜드 환경보호청(EPA) | CBAM 인증서 가격표 원문 열기

2026.11.07 · 공식 감독기관 안내 · 2026년 1 - 3분기 가격 · 기준일 현재

0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CBAM 질의응답 원문 열기

2026.05.27 · 공식 해설 · 24 - 26쪽: 조정·공제, 31·34 - 35쪽: 배출 경계

자료 범위: 법령·공식 안내는 의무와 산정 경계의 근거다. 기업 발표는 회사의 설비·제품 설명이며 CBAM 검증값을 대체하지 않는다.

16 / SOURCE REGISTER

핵심 주장과 원문 근거를 연결한다 2/2

청록색 출처번호와 자료명·'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원문으로 이동한다.

0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CBAM 배출량 검증 안내 원문 열기

2026.11.07 · 공식 안내 · 실제 배출량의 공인 검증 · 기준일 현재

09. 산업통상부 |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발간 원문 열기

2026.03.30 · 정부 발표 · 철강 전구물질·가공공정 사례와 실무 지원

10. 포스코 | 광양 대형 전기로 준공 발표 원문 열기

2026.06.17 · 회사 발표 · 연산 250만 톤·투자비·감축 경계·양산 목표

11. 현대제철 | 탄소중립 및 HyECOsteel 원문 열기

2026.11.07 · 회사 웹페이지 · 복합공정·내부 LCA·생산 계획 · 기준일 현재

12. EU 이사회 | CBAM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협상 입장 원문 열기

2026.06.12 · 협상안 · 하류 제품 확대·우회 방지 · 확정 법령과 구분

1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EUR-Lex | COM(2026) 616 입법 절차 원문 열기

2026.07.17 · 법령 개정 제안 · 2026/0212/COD · 시행 규정과 구분

14. 벨기에 연방 기후당국 | 2026년 3분기 CBAM 인증서 가격 공표 원문 열기

2026.10.05 · 공식 설명 · 82.32유로·2026년 계수 0.975

제안·협상 문서는 시행 법령과 구분한다. 11월 7일로 표시한 웹페이지 날짜는 분석 기준일이며 최초 발표일이 아니다. 설명용 수치와 배분 비율은 TradeLens의 모형 가정이다.

17 / METHODOLOGY & USE

작성 기준·면책고지·이용 안내

법령·공식 안내, 회사 발표, TradeLens 분석과 설명용 계산을 구분한다.

항목	적용 기준
시점·대상	2026.11.07 · EU CBAM이 한국 철강 공급망의 비용·가격·투자에 미치는 영향.
법령·자료	현행 기본·개정 규정과 공식 안내를 적용하고, 2026년 협상·개정 제안과 회사 계획은 별도로 표시.
계산 모형	6 - 9·13쪽의 e, b, CSCF=1, 물량·비용·배분은 설명용 가정. P=€82.32는 공표된 2026년 3분기 값.
산정 범위	법정 직접·전구물질 경계와 기업 LCA·Scope 1·2를 구분. 인증서 비용 외 원가·관세·운임은 모형에서 별도 취급.
제공 범위	산업 경제성 분석. 개별 통관·세무·법률 자문이나 실제 제품별 인증서 납부액 산출 서비스가 아니다.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시장·산업 및 기업의 경제적 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가격·목표가격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가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